

한국환경회의 정책토론회

# 2005년 환경운동 평가와 2006년 방향과 과제

2005. 12. 26.(월) 오후 2:00 - 6:00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교육관

주최 : 한국환경회의

# 2005년 환경운동 평가와 2006년 방향과 과제

## 일정안내

14:20~14:30	인사말	환경회의 공동대표
<b>1부</b>	<b>2005년 환경운동,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b>	
	좌장	백남석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14:30~14:50	주제발표 1	2005년 시민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 총평가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14:50~15:10	주제발표 2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환경운동 진영 활동 평가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15:10~15:40	지정토론	장성익   환경과생명 편집장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15:40~16:10	전체토론	
<b>2부</b>	<b>2006년 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b>	
	좌장	조현옥   성공회대 교수
16:20~16:40	주제발표 1.	2006년 주요 환경현안과 대응 전략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16:40~17:00	주제발표 2.	지방자치선거 국면에서 환경운동진영의 역할과 과제 서형원   초록정치연대
17:00~17:30	지정토론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정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 이현민   부산시민발전소 소장
17:30~18:00	전체토론	

# 2005년 시민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 평가

-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운동 진영의 대응전략에 대한 평가 -

오성규 | 환경정의 사무처장

## 1. 2005년 환경운동 여건

- 경제위기의 심화와 양극화
  -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인 내수부진, 경제위기 기조의 지속 예상
  - 경제위기의 원인
    - ; 급속한 고령화, 가계자산의 지나친 부동산 집중, 심리적 불안상태(한국경제)
    - ; 양극화
  - 규제완화에 대한 집요한 요구
  - 경제에 올인 할 것을 요구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사회 전반을 규정
  - 무한경쟁을 통한 승자독식
    - ; 경쟁적 토대를 갖지 못한 경제주체들의 생활여건 악화
    - ; 일부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불균형 심화
    - ; 경쟁력 없는 개인 역시 도태
  - 효율만능
    - ; 노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기계생산에 대한 의존율 증가
    - ; 정규직 노동자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
  - 사회 양극화 심화 및 사회 불안 증가
  
- 참여정부 하에서 “환경” 소외
  - 참여정부의 국가프로젝트인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이 공간개발전략

- 골프장 총수: 400-500개
- 수도권 주택개발 총수: 7000만평, 500만호
- 수도권 신도시 25개 규모
- 혁신도시 10-20개 개발 예정
- 행정수도 2000만평 개발 예정
- 기업도시 개발시 기업도시 1개당 200만평 이상
- 경제 자유 구역 3개
- 지역발전특화특구 100개 이상 신청 예정
-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가 최근 국가의 최고 슬로건
- ‘환경비상시국회의’ 요구에 대한 무대응

○ 환경과 멀어지는 국민의식

-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심화
  - \* 개인적 관심사(2002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동, 제일기획 사보)
    - 건강/질병(48.8%), 가정/가족(47.7%), 자녀교육(29.9%)
    - 재산증식(19.4%), 식생활(10.1%), 공해/환경문제(3%)
  - \* 관심있는 사회문제(2002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동, 제일기획 사보)
    - 교육(33.4%), 범죄/사건/비행(29.5%), 국내정치(27.8%)
    - 주택/토지/부동산(24.5%), 공해/환경오염(13.6%)
- 경제문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약화됨
  - ; 10억 모으기(왜곡된 인생이모작 - 부동산 투기)
- 시민들의 수용력 저하
  - ; 환경의식과 소득과의 비례관계

○ 시민환경운동의 위상과 역할 약화

- 사회적 의제 세팅에 관한 주도력 상실
- 운동방식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함; 이슈중심의 대응, 네거티브
- 취약한 기반; 세계사적 흐름, 대중매체, 시민들의 당위론적 환경보전주의
- 공동대응(연대) 능력 상실
-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함; 정파적 태도
  - 천성산, 중저준위 핵폐기장
- 사이버 정치공간; 조직운동이 아니라 직접 참여운동

※ 시민단체 회원 감소

- 시민환경운동의 민주성과 책임성
- 시민들에 대한 영향력 축소  
; 환경비상시국회의 VS 성미산 살리기
- 운동전반에 대한 도덕적 비판

○ 각종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가시화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범사업 6곳 선정
- 지역특화특구: 이미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 있음
- 핵폐기장, 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 수도권 신도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 수도권 광역교통계획(민자도로 포함) 추진

## 2. 환경운동의 대응

○ 2005년, 초록행동단으로 시작

- 환경비상시국회의의 구체적인 행동프로그램으로 1월부터 초록행동단 활동
- 전국 22곳의 각종 환경현안이 있는 곳을 직접 체험·대응

○ 각종 개발현안 대응

- 방폐장 부지 선정 대응
- 지울스님 100일 단식과 천성산 공동조사
- 기업도시 반대운동
- 새만금 법적 대응
-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 반대 운동

○ 기타

- 기업감시운동 본격화
- 체세포 복제 및 생명윤리감시 운동
- 2008년 람사총회 유치

### 3. 평가 및 과제

- 2005년, 무기력한 환경운동
  - 이렇다 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한 한 해
    - ; 조정기, 위기, 새로운 모색기 등으로 표현됨
  - 방폐장 선정이 국가적인 현안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응 못함
    - ; 사실상 부정선거 감시운동 수준에서 대응
    - ; 명확한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화시키지 못함
    - ; 포괄적인 연대를 조직하지 못함
  - “황우석 사태” 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못함
    - ; 돌이켜보면 이미 환경운동진영 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안
    - ; 적극적 의지의 결핍
  
- 환경지킴이로서의 희망을 보여주지 못함
  - 정부, 기업, 시민 등 사회 전반의 환경보전 세력 약화
  - 유일한 환경지킴이 세력으로서 대안적 희망을 조직하지 못함
  
- 연대(협업)의 실패, 다양성의 제약
  
- 전환기시대, 기존방식의 운동 실패, 새로운 자기 위상 찾기
  - 시민·환경운동과 시민(사회) 간의 ‘인식의 괴리’ 가 너무 커짐
  - 포디즘적 환경운동의 한계와 폐해
    - ; “대량생산, 대량소비” , “표준화”
    - ; 90년대 중·후반 이후의 환경운동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이념적 지평위에 수많은 조직들이 수평적으로 펼쳐져 각개약진하는 양상
    - ; 자기색깔을 가지고 대중과 현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운동규모가 변별의 기준
      - 환경운동의 양적축적 방식
  - 새로운 자기 위상 찾기 필요

## 2005년 환경운동 평가

이상훈 |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1. 2005년 환경운동의 여건과 흐름

2005년 환경운동은 2004년 11월 10일 출범한 ‘환경비상시국회의’ 활동의 연장선에서 시작되었다. 기대도 컸던 만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경시했던 참여 정부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분노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광화문 열린마당과 환경파괴의 현장에서 참여 정부를 규탄하고 국토와 생명 수호의 결의를 높일수록 메아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초록행동단의 생생하고 애절한 현장 소식에도 언론은 침묵했고 시민들의 호응은 미약했다. 환경이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위기에 대처할 능력도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고 내부의 웅성거림은 커졌다.

지상 논쟁이 잇달았고 한국환경회의에서도 함께 모여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진단하였다. 세간의 진단을 종합하면 환경운동은 물량 위주, 수동적 대응 위주의 ‘90년대식 운동’에 맴돌고 있고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이 부재’하다. 21세기를 끌어갈 ‘철학이 빈곤’하고 ‘도덕적 리더십’도 약화되었다. ‘권력화’, ‘제도화’, ‘관료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재정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며 회원과의 소통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결국 환경운동의 신뢰가 떨어지고 시민에 대한 설득력, 영향력도 감소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환경운동의 여건은 과거에 비해 악화되었다. 한 때 노동운동과는 다른 세력이라고 해서, 문제제기와 주장이 신선하고 참신하다고 해서, 생산적이고 실재적인 비판을 가한다고 해서 언론이 시민운동의 주장을 크게 증폭해주던 좋은 시절이 멀찌감치 가버렸다. 소비자의 욕구(시민의 관심)를 반영한 것이겠지만 NGO팀을 만들고 NGO지면을 따로 둔 시절도 있었다. 2000년 총선연대 활동 시 언론과 NGO 간 우호관계는 절정에 달했지만 곧 바로 시민단체가 언론 권력의 경쟁상대가 될 만큼 너무 커버렸다는 것을 언론이 자각하는 계기였다. 그 뒤로 보수 언론은 시민단체, 특히 환경단체

의 정당한 주장도 흘려본다. 도덕적 리더십이나 지적 리더십에 조그마한 빈틈이라도 보이면 승냥이떼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다. 중도 언론조차도 양비론의 시각에서 환경단체의 주장을 다룬다. 또 정부는 핵폐기장 등 주요한 갈등 사안에 대해선 과거와 달리 정책 홍보에 대한 컨설팅을 토대로 체계적인 정책 홍보에 나서며 물량을 투입했다. 일부 언론은 정부 홍보와 다른 주장을 아예 거들떠 보지 않았다. 그나마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있기에 아직도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언론은 흘려듣진 못한다.

언론의 태도 변화에는 광고주인 기업의 생각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정권도 함부로 못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과 먹살잡이를 하는 참여연대의 부상은 기업들이 시민단체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기업집단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환경단체와 마찰을 키우더니 얼마 전부터 환경단체를 경제에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적대감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대한상의 등 기업집단은 환경론자들 때문이 대책사업이 지연되고 중단되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편파적인 보고서를 내고 ‘지속가능 성장’ 개념을 내걸었으며 교토의정서 탈퇴론을 홍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운동의 흐름에 저항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개혁 실패는 환경운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시민의 개혁 의지에 힘입어 출범한 노무현 정권이 개혁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보수의 반격이 몰아치고 있다. ‘뉴라이트를 키운 것은 9할이 노무현 정권’이라는 보수 인사의 말처럼 개혁과 진보의 상징성을 띤 (실제와 상관없이) 현 정권의 실패는 환경운동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환경단체를 후원한다. 시민들은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환경단체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익숙하다. 특히 건강과 관련한 식품문제, 유해물질 문제에는 환경활동가 못지 않게 관심도 많고 소비자 선택권도 빠르게 행사한다. 하지만 후원 회원 증가는 정체상태이다. 갈수록 시민들의 관심은 다양해지고 젊은 세대일수록 온라인 집착,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다. 환경운동이 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졌다고 느끼고 재미와 신선함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 2. 2005년 환경운동 총평

1월 3일부터 초록행동단이 20여일 다녔던 환경현장 대부분에서 생명의 기운은 약해지고 우려는 현실로 바뀐 한해였다. 참여 정부는 토건 국가로 치달으면서 국토와 환경의 희생을 대가로 건설 자본의 배를 불렀고 논란이 되는 사업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내세우고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국익의 논리로 밀어붙였다. 핵폐기장, 새만금, 기업도시 등



갈등을 빚어 온 주요 환경사안에 환경운동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 회원 수는 정체내지 감소했고 재정 상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탓인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사직하는 활동가들은 늘고 있지만 활동가 충원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나트륨·방부제·유전자조작농산물 등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난지도 골프장 공원화를 위한 연대 활동이 활발했으며 대지산 복원,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2008년 람사총회 유치, 왕피천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 서울시 대중교통 활성화 등 지속해 온 환경운동이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한편, 기업 감사와 기업사회책임을 촉구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국제포경위원회 울산 총회를 계기로 고래보호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증대했으며 해양 투기에 대한 문제점도 새롭게 제기되는 등 새로운 환경운동들이 성장하였다. 환경과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생태적 대안 경제체제 구상,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 정책 전환 등 새로운 발상과 개념을 던지는 활동도 시작되었다.

### 3. 주요 사안별 2005년 환경운동

- 2005년 환경뉴스를 중심으로

#### 1) 토건 국가를 향한 국책 사업 강행에 힘이 부치는 환경운동

##### ■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경쟁을 통한 토건사업 확대

지난 해 말 기업특혜, 사유재산 침해, 난개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올 해 7월, 무안, 무주, 원주, 충주에 기업도시 시범지구가 졸속 지정된 데 이어, 8월 환경성 평가에서 과락을 받은 해남영암, 태안 지구에 대한 기업도시 시범지구가 추가 지정되었다. 기업도시 추진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선정과 맞물리면서 전국의 부동산 개발붐을 야기하였다. 특히 무주와 추가로 지정된 해남영암, 태안 같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사실상 골프장과 카지노, 경마장 등 사치성, 사행성 시설 단지 조성을 빌미로 개발붐을 조성하면서 대규모 자연환경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무안도 산업교역형이라기 보다 자연파괴형 관광레저 단지 개발로 변질될 것이다.

환경정의, 녹색연합, 환경연합과 해당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연대 활동을 펼쳤지만 시민들은 무심했고 언론은 정부 논리에 끌려 있었고 정부는 일사천리로 토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04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2005년 대응은 한계가 분명했다. 환경운동은 개발 광풍에서 지역 사회를 일깨울 논리와 비전 제시가 어

려왔고 기업도시 지정과 개발이 가져 올 총체적인 문제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기업도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청사진처럼 조성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약간의 관광 위락 시설 조성에 그치면서 땅투기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천수만 철새 서식지처럼 앞으로라도 대상지의 천혜 자원이 가지는 보전가치를 부각하여 개발없이도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계속 알려야 할 것이다.

### ■ 법정 공방에 맡겨진 새만금 간척사업

2005년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3년 넘게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범위를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정부산하에 두고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는다’ 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이어 2월 4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하여 농림부 장관의 위법을 인정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운동의 중대한 결실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허구와 이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정당성을 입증 받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항소를 시작해 다시 법정공방이 되풀이 되었다. 12월 21일 항소심에선 법원이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농림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결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즉각적인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3월~4월까지 새만금 방조제 최종물막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거의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최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의 외연을 확장하고 입장의 유연성도 강화하여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를 결성되었고 각 단체 파견자들이 사무국을 구성한 상태이다. 국민회의에선 법원의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새만금갯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고 싶은 시민들의 소망과 의지를 어떻게 결집할 지가 과제이다.

### ■ 핵에너지에 정책에 대한 사회적 성찰없이 지역주의를 최대한 이용해 중저준위 핵폐기장 후보지 경주로 선정

11월 2일 경주, 포항, 영덕, 군산에서 실시된 중저준위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는 사상 유례 없는 불법과 불공정으로 얼룩지고 망국적 지역감정까지 조장되었다. 이번 주민투표가 불공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근본 원인은 부지 안전성은 뒷전인 채 ‘주민수용성’ 위주로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주민 투표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로 변형시켰고 찬성률을 높이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핵폐기장 유치를 '3000억원+알파'가 걸린 이권사업으로 포장하였다. 부재자 신고 과정에 공무원들과 통반·이장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군산은 부재자 비율이 39.36%에 이르는 등 사상 유례없는 부정이 발생했다. 결국 관권동원과 지역감정 선동의 영향으로 투표율과 찬성률로 경주가 중·저준위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중·저준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총체적인 패배를 경험하였다. 부지 선정 백지화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었지만 투표율과 찬성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핵폐기장 논란의 배경인 핵에너지와 핵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실패하였다. 정부의 추진 방식과 정책 홍보 전략이 크게 달라졌음에 비해 반핵운동은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 ■ 황우석 교수팀 줄기세포 연구 대응

줄기세포 연구는 접근이 쉽지 않은 과학분야이긴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에서 이 분야를 맡는 활동가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개 정책단위에서 연대 활동을 담당하는 정도이지 광범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안에서 1차 정보를 수집·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활동가가 없다. 이번에 황우석 교수팀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는데 생명공학감시연대가 일정한 역할을 했고 연구 조작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균형잡힌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생명공학감시연대는 시민과학센터의 정보와 판단에 의존했지 환경단체들은 수동적인 협조에 머물렀다. 줄기세포 연구나 유전자조작 농산물 같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선 이 분야에서 환경단체의 기술 자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 ■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되고 기상이변은 속출하지만

97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후, 8년 만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미국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는 한층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2005년 12월 몬트리올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통해 2012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의무 감축이 진행되며, 마라케시합의문을 통해 1차 의무 국가들의 감축의무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된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의무부담 참여 논의도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기후협약이 강화되는 동력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태풍 카트리나가 미국 남서부를 덮쳤고 호남 지역은 아직도 유례 없는 폭설에 묻혀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사안이고 환경단체들의 국제연대도 매우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환경단체들이 이 사안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 기후변화 관련 토론회 개최, 교육·홍보 활동,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 저지 캠페인, 이산화탄소를 잡아라 캠페인 등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시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데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도 환경단체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 지 고민이 필요하다.

## 2) 지속적인 운동의 결실

### ■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2005년 1월 1일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오랫동안 지속된 녹색연합의 백두대간 보호 운동이 낳은 성과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처와 10대강의 발원지인 백두대간을 보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은 지자체의 개발사업 추진 욕구와 산림청의 비민주적인 지정절차로 표류하던 중 지난 6월30일 26만3000ha로 확정·발표되었다. 환경부와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최소면적으로 설정했던 53만 ha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쪽짜리 백두대간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이다. 지자체 개발사업이 계획된 곳은 대부분 보호구역 설정에서 제외되었으며, 백두대간 훼손의 주범인 국책사업 또한 대부분 허용하고 있어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향후 생태적 지속성과 연결성이 확보되어 백두대간이 제대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백두대간보호법 개정과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 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다.

### ■ 매향리 미공군국제사격장 54년만에 완전폐쇄

지난 8월 12일부터 폭격을 알리는 황색기가 내려지고 매향리 평화마을을 상징하는 녹색기가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올려지면서 매향리 미공군국제사격장의 역사적 종말을 고했다. 1988년 시작된 미공군 폭격연습장에 대한 매향리 주민들의 폐쇄운동은 2005년 8월 30일, 매향리 미공군국제사격장이 완전 폐쇄될 때까지 노동자, 농민, 종교인 등 수많은 각계각층의 참여가 있었다. 이러한 대중적인 참여는 매향리 미공군국제폭격장 폐쇄운동을 국제적인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사격장 폐쇄로 승리를 거둔 매향리는 또 다른 차원의 평화운동이 계획 중이다. 평화운동의 상징인 매향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알리는 '매향리투쟁역사기념관' 건립을 시작으로 사격장 부지를 활용하여 평화박물관, 평화생태공원 등 '매향리 평화마을'을 단계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 ■ 왕피천 국내 최대규모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2005년 8월 국내의 마지막 청정하천인 왕피천 유역이 국내 최대규모의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지역은 경북 울진군 왕피천 유역 및 통고산, 천축산, 대령산 자락을 포함하는 102.84km<sup>2</sup>(3천1백만여평)로,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의 95%가 넘는 정도로 식생 및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수달, 산양, 매, 삿, 담비 등 다수의 멸종위기야생동물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태계 파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앞다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울진군청)가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자연생태·환경종합조사를 진행하면서 보전지역으로 추진해 온 모범적인 사례이다. 또한 기존의 분류 중심으로 보전지역을 지정했던 개념을 뛰어넘어 하천의 발원지인 산지를 유역권 개념으로 포괄하여 지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 ■ 대지산 생태 복원

농림부, 산림청,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1회 전국 우수 산림생태 복원지 선정대회에서 용인 대지산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난개발의 위기 속에서 대지산을 지켜낸 모든 시민들과 그 후 대지산의 생태복원을 위해 노력한 환경운동의 결실이다.

난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대지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린벨트 지정청원’, 땅 한평 사기운동, 17일간의 나무위 시위등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중심이 된 녹지보전 운동으로 지켜낸 곳이다. 그 후 ‘주민참여형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며, 조성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반영 및 조성과정 속에서의 모니터링활동, 주민참여프로그램등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3년 동안의 노력으로 훼손된 대지산에는 다시 생명이 찾아왔고, 지역주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 갈 수 있었다.

## ■ 2008년 람사총회 개최국 결정

2005년 11월 16일, 제9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 경상남도가 2008년도 제 10차 람사 총회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1996년부터 람사총회에 참석하고 2002년 람사총회에선 삼보일배를 통한 새만금 갯벌 살리기를 호소하는 등 환경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 람사총회 개최국 결정에 걸맞지 않게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새만금 갯벌에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이고 있고, 동양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습지보전지역에 명지대교 건설을 허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국내 습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과 습지보전 정책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 3) 새로운 운동의 시작

#### ■ 국제포경위원회 울산 총회와 고래 보호운동

5월 27일부터 6월 24일 사이에 울산에서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와 여러 부속회의들이 개최되어 고래잡이에 관한 열띤 논란이 벌어졌다. 이 회의를 앞두고 일본은 자국의 경제력과 대외원조를 미끼로 가난한 약소국을 대상으로 국제포경위원회 가입을 유도하여 상업적인 고래잡이 찬성 세력을 늘리려는 표 매수 행위를 벌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으나, 다행히 일본에 찬성하는 국가의 숫자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제포경위원회 총회가 한국 울산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환경단체들의 고래 보호운동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3월 18일부터 한 달 가량 그린피스의 레인보우워리어호가 한국을 방문하여 국내 환경단체와 함께 한국 연안의 고래류 조사와 각종 고래 보호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울산 장생포에 고래 해체장 건설 부지에 고래대사관을 설치하고 고래 보호운동을 벌였다. 국내 환경단체들과 함께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국제동물복지기금,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등도 고래 보호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고래잡이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보다는 고래를 보호해야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확인되기도 했다.

- 환경과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생태적 대안 경제체제 구상
-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 정책 전환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운동

## 환경운동을 전망하며

김제남 | 녹색연합 사무처장

한해의 수고와 결실을 나누고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넉넉한 어머니 품으로 항상심을 갖습니다. 우리 사는 사회도 많은 사람들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균형을 유지하며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도 그 변화의 진통과 갈등 그리고 성찰과 깨달음이 공존하는 가운데 역사의 한 장을 걸어온 듯 합니다. 지난해 나라살림이나 가정살림의 어려움이 커서 경제지표와 경기부양이 우선하고 경제성장이 행복이요 국익의 최우선이라는 여론이 그 어느 해보다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운영위가 국민여론조사에서 과거 10년 전 89% 국민들이 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가 우선하다고 했던 것과 달리 56% 이상의 국민여론이 경제성장이 환경보호보다 중요하다고 한 결과는 현 세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천성산 관통터널 문제, 핵폐기장 문제, 새만금 문제 등 환경현안은 생명의 가치나 안전성 문제보다 그 사업의 개발가치와 경제효과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황우석 영웅 만들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진실문제로 국민들이 받은 허탈감과 상처도 사실은 성장우선 논리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급속하게 만들어 낸 영웅은 생명공학산업을 선도하여 부를 창출하고 세계 제일 또는 세계 최고의 국익을 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국민을 유일 여론 편에 줄 서도록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 왕따가 됩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생명체인 배아줄기세포를 복제하는 생명윤리 문제나 여성의 난자를 인위로 다량 끄집어 내는 일이 생명질서를 거스르고 자칫 여성의 몸에 가하는 조용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왕왕 정권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거나 사회를 보수화시켜 기득권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지난 12월 2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새만금 2심 재판결과를 보며 그 거대한 자연유산 깎벌이 주는 생태계 가치와 생명의 조화로운 관계망을 짓는 경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재판부의 판단이 무척 아쉽니다. 갯벌의 형성과 현존은 자연이 수천만년동안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만들고 있는 창조이자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 누구도 일거에 갯벌을 걷어내고 사용용도도 불분명한 인위의 땅을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수 년 끌어 온 갈등현안이라는 이유로,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승복하고 개발하자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갯벌과 그 곳에 사는 지역주민의 발전과 미래가 공생하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울리고 서로 기대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살맛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람있게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크게 거스르지 않고 생명이 있는 것이 다 생명다운 존재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경제 발목 잡는 환경단체’ 라는 정부와 사회 일각의 눈총을 받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만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과 환경단체 회원들께서 보내 주시는 지지와 참여에 힘 입어 녹색의 중심을 잃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성찰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의 속도로 사는 노력과 녹색생활을 살아야겠습니다. 가치이건, 물건이건 쉬이 버려지고 편리만을 찾는 삶이 유행인 듯 합니다만 우리 삶의 동반자로 자연을 모시는 삶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 거는 기대가 큰데 실상 전국의 땅값이 오르는 것 말고는 각 도시의 비전과 미래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땅값만 오르면 줄부들이 늘지 모르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빈부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는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할 지 긴 호흡으로 우리 사회를 재창조하는 철학과 지혜 그리고 정책과 실력을 차분하게 쌓아야 합니다.

생명의 존귀함과 그 생명 가치는 시류를 타는 유행이 아닙니다. 당장의 주류가 아니어도 자연이 넉넉하게 생명을 품는 항상심처럼 옹운 소리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진실입니다.

저는 2006년 생명의 가치를 놓고 더 많은 토론과 녹색생명 담론이 넘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 그리고 환경활동가와 회원들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책임 있는 성원으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사회상과 녹색대안을 만드는 대화와 교류, 실천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해 이끌어 주고 연대협력한 지인들, 활동가들과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200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시민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11.26 대화모임 발제문)

### (현실 진단)

- 지난 15-20여년 시민운동의 압축고속성장은 부패무능한 정부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통해 가능 (시민운동이 이슈주창과 준정당조직으로서 정책대안세력의 성격으로 성장) 그러나 현안예의 몰입과 역량소진
- 현 시기 시민운동 역량의 한계와 미래를 위한 준비부족으로 운동전략과 비전 부재는 시민운동의 위기를 불러옴
- 시민운동의 분화와 시민운동 정체성 혼란 : 시민운동가 정당조직 등으로 분화(특히 지역운동의 경우), 이익집단의 시민운동화
-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개발연대의 세력화와 개발이데올로기 새로운 등장 그리고 정권의 유지기반으로 작용 (국익을 앞세운 황우석 신드롬, 방폐장 유치경쟁 등)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요구가 또다른 지역주의와 획일주의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함(기업도시, 행정도시, 방폐장 유치경쟁 등)
- 실제 역량보다 과도한 현안대응과 연대에 지친 단체나 부문들은 실리추구와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개별화되면서 시민운동 전반을 평가하고 준비하지 못함

### (화두 던지기)

- 시민운동리더들은 시민운동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 너무나 바쁜 운동가들, 역량을 소진한 운동가들의 현실은 우리 시민운동의 진정한 리더십과 리더들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교과서식으로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면서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운동의 전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시민운동의 진정성에 던지는 시민의 비판 (문제제기하고 빠지는 시민운동에 대해 책임성과 대안 부재를 들어 비판)

- 사회양극화에 따른 박탈감과 빈곤(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시민운동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가 : 모든 문제를 개발로 해결하겠다는 개발만능정책에 대응한 시민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 시민운동의 오랜 현안문제를 지혜롭게 총화하고 장기투쟁을 준비하려면?

- 환경진영은 새만금, 핵폐기장, 천성산 등 대형 국책사업이 개발욕구에 힘입어 개발 방향으로 갈 때 운동의 명운을 걸었던 이 현안을 지혜롭게 총화할 필요 절실

- 평화진영은 이라크 파병대응 / 농민진영 쌀투쟁 등

○ 시민운동 실력과 운동성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는가?

- 시민사회 가치관과 비전의 재정립 / 사회비전과 정책 및 대안 설계 능력 제고

- 실력있는 운동가들이 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재교육 및 재생산 시스템 준비는?

(시민운동가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 그리고 이를 설계할 능력을 갖추고 있나)

- 시민운동 싱크탱크 / 감동 프로젝트 생산 / 시민운동발전센터

○ 시민운동을 시민의 것으로 시민의 조직으로 재조직하고 있는가?

- 회원 및 자원활동가 참여 그리고 활동회원

- 시민의 자발성과 생활형 운동의 창조

-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 시민운동 재정은 자립이 가능한가?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 지속가능한 운동가를 위한 활동비 보장 /

## **환경운동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1. 환경운동의 사명감과 진정성을 높여 신뢰 회복과 강화**

○ 더 이상 시민운동 전성기에 얻은 후광으로 환경운동 지속하기 어려움. 그동안 사회 문제로 드러나지 않은 환경문제에 대한 폭로와 비판 그리고 개발위주 정부정책 반대 활동으로 쌓은 신뢰와 운동의 에너지 고갈은 환경운동 위기 의식을 갖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한 단계 성숙한 환경운동과 실력이 요구됨

○ 여전히 듣고 있는 ‘반대를 위한 반대운동’ ‘대안없는 비판’ ‘치고 빠지는 무책임성’ ‘경제 발목잡는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겸허히 성찰하고 선전포고나 구호식 주장, 일방의 대화법에서 쌍방 대화와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함

○ 환경단체들이 어떻게 정책을 바꾸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있는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중하고 아름다운 성과를 환경운동의 지표로 개발하고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시민의 세금 낭비를 줄여 기여한 것, 주요 환경정책이나 법, 제도 개선으로 공익에 기여한 것, 환경단체 회원의 참여와 후원이 늘어나는 것, 멸종위기 동식물을 구한 것, 사회약자의 환경질이 개선되거나 건강에 기여한 것, 지역별로 녹색도시로의 변화 지표 등등

## 2. 녹색담론과 녹색사회를 향한 정책과 비전만들기

○ 낡은 개발 패러다임과 사회구조에 대응한 녹색담론과 대안만들기를 위한 토론과 실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편가르기식 논쟁이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충분한 토론, 검증, 실험으로 운동의 활력과 시민의 기대와 참여가 커지도록 노력

- 리영희 선생님의 ‘전환시대의 논리’ 에 나오는 지식인과 지식기사의 큰 차이처럼 각 환경단체나 활동가들이 이슈나 전담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면 환경운동의 사명이나 철학의 깊이를 체득하기 어렵고 대안세력으로서 신뢰와 능력을 갖기 어려움

- 성장이나, 분배냐를 놓고 토론과 논쟁이 있고 보수, 진보 이데올로기로 가르는 정파간의 다툼이 있지만 본격 그 사회상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함. 환경이나 개발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쟁도 개념과 원칙을 정의하는 정도에 그침

- 환경현안과 조직운영에 치여 있는 상근 활동가들이 녹색담론과 미래설계까지 다 하기 어렵고 경제학, 철학, 윤리학, 사회학 등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안을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내 환경운동 진영으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함

○ 환경운동 정책 생산력을 높이고 대안만들기에 기여할 싱크탱크 조직화가 중요함. 각 단체별로 연구소 및 정책단위를 통해 단체 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을 만들고 있으나(단체별, 활동의제별로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는 강조되고 중요하게 준비할 필요) 전체 환경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함

- 초기단계로 한국환경회의가 분기별로 환경정책포럼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더 나아가 시민운동이나 민중운동 정책단위와도 년 1-2회 정책교류 필요(한국사회포럼, 시민단체연대회의를 통해 적절한 연계방안을 찾을 수 있음)

### 3. 활동의제 재정립과 분담

○ 환경운동의 중심을 이루어 온 환경현안(새만금, 천성산, 핵폐기장 등)을 책임있게 평가하고 결속하는 일이 중요함. 국책사업의 문제점 부각, 생명의 가치와 철학 논쟁, 환경이나 개발이냐를 놓고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 여론주도층 및 다양한 세력의 참여와 실천, 환경운동의 국내외 성장과 영향력 제고 등 긍정의 역할을 한 환경현안 대응운동으로 얻은 성과를 잘 계승하고 남겨진 과제를 잘 완수하는 책임성이 크게 요구됨. 자칫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 는 것이 청산주의로 빠지는 것을 경계함.

- ‘새만금’ 은 12.21 새만금 2심 결과이후 언론의 보도경향, 시민의 반응으로 보면 재판결과에 안타까워 하고 대화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여론이 결코 적지 않음. 호소하고 사정하며 매달려야 하지 않겠나, 2006. 3-4월 마지막 물막이 공사로 해수흐름이 차단되어 급격하게 갯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해수유통 조치를 근거있게 제시하고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는 여론주도층에 있는 인사들을 통해 전북, 정부와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야 함. 대법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확정판결이 2심과 같을 가능성이 크다면 상고를 하지 않고 대화를 제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있음(법에 의한 호소가 아니라 새만금 갯벌 생명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으로 호소하고 대화를 제의하는 방안) / 물막이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생태변화와 수질변화 등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장기전 준비)

- 천성산은 민관공동조사단 최종 보고서 작업을 앞두고 11.23 정부의 일방보도로 깨질 상황에 있고 지울스님이 장기단식에 들어가 있음. 최근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천성산 쟁점의 핵심이 이 문제인만큼 이를 민간위원들이 심도있게 조사하고 천성산 습지 영향을 평가하여 공동조사단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공동조사단 명예회복과 정상화를 요구, 그리고 민간위원들이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내놓은 공동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천성산 대책이 설득력을 갖도록 하는 것. 또한 지울스님이 단식을 멈추는 것이 지인들의 만류로 될 수 없는 일이라면 생명을 향한 숭고한 입적이 되도록, 스코리어링과 같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마음다짐

- 핵폐기장은 중저준위 방폐장으로 결정이 난 경주지역에서 정부가 지역민에게 제시한 경제효과 거품이 빠지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과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져야 함. 또한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핵위주 에너지정책 전환과 함께 사회공론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 방폐장 정책을 근본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함

- 의제의 집중과 분산을 적절하게 잘 해야 한다. 환경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실천할 의제를 집중하여 선택하는 것과 각 지역, 단체들이 특성에 맞게 전문화한 의제를 잘 하도록 분담하여 지원하는 것을 잘 해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라는 국정과제 속에 등장한 각종 도시(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신도시 등)개발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의제는 지역의 지방분권운동을 하는 단체들과도 연대하여 공동의제로 실천과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지구환경문제로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과 에너지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후문제에 중장기 대응전략을 준비하여 시민교육, 지역행동계획, 기업 기후감시 등 중장기 실천과제가 요구되는 ‘기후행동네트워크’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단체별로 특성을 살려 브랜드화한 활동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분담하여 전문화하고 함께 지원, 협력, 홍보하는 역할을 통해 시너지를 내도록 함

#### 4. 환경운동 활동력과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연대방안

- 환경운동의 역량과 비전을 갖추려면 지속가능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운동가들이 튼튼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활동가 실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함. 개별 단체들이 단체특성별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이나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 교재 및 필독서, 강사진 등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연대활동이 될 수 있음
  -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공동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제 시작할 때
- 환경단체 회원이나 시민들을 위한 녹색강좌를 공동으로 진행하면 개 단체만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연대 활동이 될 수 있음
  - 시민들이 녹색담론, 녹색실천을 배우고 다양한 의제와 정보 획득, 폭넓은 환경운동 이해와 교류, 실천의 장이 될 수 있음
  - ‘시민을 위한 녹색강좌’를 공동 프로젝트로 제안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공동추진 가능

○ 환경운동을 잘 하려면 더 많은 열정과 정성 그리고 투자가 필요함. 특히 활동가, 회원, 시민을 향한 투자와 서비스는 더욱 커져야 함. 개별 단체가 하기 어려운 것은 조금씩 힘을 보태어 연대를 통해 풀어갈 수 있으니 이것이 연대협력의 힘이자 환경운동의 활동력, 생활력으로 보여질 것임

## 2006년 지방자치선거와 환경운동

서형원 | 초록정치연대 활동가

### 초록의 희망은 어디에? — 2006 지방선거와 초록정치<sup>1)</sup>

안타깝게도, 희망 못 찾겠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갈수록 더 잦다. 희망? 물론 있다. 내게 자기 지역엔 희망이 없다고 한 그분도 더불어 사는 생태적 삶을 위해 귀농을 했고 내년엔 흙집을 지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그의 삶은 행복하다. 함께 공동체를 이룰 사람들도 찾아내고 있으니 분명 그의 삶은 초록빛이다.

그런데도 희망이 없다고 한다. 나이 오십이 되어서야 다른 삶을 택한 니어링 부부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든 다른 삶을 택할 희망이 있다. 하지만, 고립된 나의 삶이 아닌 우리의 삶, 그러니까 마을과 지역, 우리 사회를 함께 손잡고 초록으로 만들어갈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초록정치는 삶과 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과 힘을 공간적으로는 ‘지역’ (마을, 시, 군, 구)에서, 주체로서는 생활인들의 ‘풀뿌리 정치운동’에서 찾고 있다. 풀뿌리의 ‘연대’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희망이 없다는 말은 결국 연대의 불가능성, 고립과 경쟁의 관계에 가로막힌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연대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자치역량, 즉 ‘지역초록정당’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지역정당의 더 넓은 연대를 통해 새로운 판을 짜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화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시장의 야만에 우리 삶과 지역, 자연과 미래를 내맡기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기획이면서 동시에, 국가주의 정치 정치에 대한 비판, 권력 장악이 사회변화의 가장 유력한 길이라는 사고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또한 수많은 개선과 개혁의 집합으로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환경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

1) “작은 것이 아름답다” 2006년 1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대안 가치를 변화의 포괄적 비전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운동인 초록정치운동을 전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변화의 필요성? 갈수록 사람들이 누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해 살아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소모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필요성을 재론하는 것은 좀 사치스러워 보인다. 주위를 돌아보자.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 하지 않는 시간도, 심지어 나의 외모와 건강을 돌보는 시간조차 노동력으로서 나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또 다른 투쟁의 시간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싸워 이겨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대명령에 순종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기회만 되면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탈출의 욕망을 키워가고 있는 모순의 삶이 이 시대의 풍경이다.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명백하다. 불과 이삼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보라. 다른 지역에 빼앗기면 안 된다고 핵폐기장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년 전에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는가? 생명윤리니 학문적 진실이니 하는 것이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최근의 광기를 짐작해본 적이 있는가? 농업이니 환경이니 하는 것들이 노골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의 적으로 치부되는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온 가치들이 점점 설자리가 없어지고 도리어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하는 현실에 하나같이 당황하고 있다.

왜 이런 삶과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해 연대하여 싸우지 않는가? 나는 이 사회가 점점 더 사람들을 각자의 생존, 생계, 직업적 테두리에 몰두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완성해가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불안정한 약간의 보수, 경쟁에서 이길 막연한 가능성, 몇몇 성공한 이들의 신화, 직업적 경계에 사람들을 가두는 다양한 기제들이 사람들을 생존과 무한경쟁의 붉은 바다로 몰아넣고 있다. 심지어 활동가나 진보적 연구자들도 직업화된 활동이나 생계 때문에 더 넓은 연대나 변혁적 활동에 나설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고 느낀 적이 많다.

따라서 삶과 세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자기의 삶을 통해 변화의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는 생활인들의 연대가 어디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에 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녹색정치, 혹은 초록정치가 출발해야 할 현장이다.

얼른 정당을 만들어 힘을 키우고 우리 식의 좋은 정책,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것은 초록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영국 역사학자 테오도르 젤딘은 [인간의 내밀한 역사]라는 탁월한 저서에서 녹색운동이 인간의 열망을 전체로 충분히 보지 못해 퇴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인간 삶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천연 자원과 같은 특정 관심사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녹색은 '이룩하지 못한 이상주의' 가 되었다는 통찰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록정치란 특정한 정책에 관심을 가진 그룹이라기보다 틀 자체를 바꾸는 정치, 여성정치운동에서 말하는 ‘새판짜기’를 전제로 하는 정치였다. 정치, 정당, 사회, 삶, 인간관계의 틀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정치다. 첫째, 특정 부문에 대한 관심에서 나아가 사회와 삶의 전체 영역에서 생명, 평화, 나눔, 성평등, 다양성 등의 대안 가치와 정책 실현하기, 둘째, 권위와 중앙집중, 권력독점의 추구가 특징인 기성정당의 틀을 깨고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인 리더십, 수평적 연대, 탈권위적 의사결정과정을 스스로 실천하는 새로운 원리의 정당, 셋째, 정치는 당연히 국회, 대통령 등으로 표현되는 국가정치라는 관념을 벗어나 생활공간에서 펼쳐지는 지역정치를 중심에 놓고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자기 과제로 받아들여 연대하는 정치, 넷째, 반생명적이고 경쟁적이며 파편화된 현재의 삶을 대신할 녹색 삶의 공간과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2002년 지방선거에서 환경, 여성, 지역풀뿌리운동의 활동가들이 기성정당을 거부하고 지방의원에 당선되었고 초록정치연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이후 정당 설립 요건 대폭 강화,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큰 정당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 양당 구조를 고착시키는 2인 선거구 확정 등이 차례로 도입되면서 초록의 풀뿌리 정치운동은 모진 시련을 겪고 있다. 기성 정당이 풀뿌리정치를 포함한 모든 정치공간을 남김없이 장악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항하는 연대는 미약했다.

그러나 자기 지역으로부터 희망을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와 달리 개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넘어 앞서 말한 대로 지역초록정당과 같은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 각 곳에서는 기초 자치단체별로 풀뿌리초록정치를 지향하는 지역정치운동이 생겨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광역 차원의 지역풀뿌리초록정당을 만들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정당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정당법에서는 제도정당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광역시도지부가 다섯 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유례없는 정당법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노력들의 연대를 통해 제도정당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제도적 불리함을 무릅쓰고 초록의 가치를 지향하는 여러 지역의 시군구의원들과 서울시의원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전국적인 제도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생활인이 주도하는 진짜 풀뿌리정치를 일군다는 생각이다.

올해 5월부터는 이러한 노력을 펼치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풀뿌리초록정치를 지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공감하고 연대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적 노력과는 별도로 청년들의 초록정치운동도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 여성, 평화운동 등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협력틀도 모색되고 있다.

초록정치란 생활인들의 절박한 요청이며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환경·시민운동이 만들어 내야 할 실천이라고 믿는다. 건강과 환경보다 자유무역과 기업을 우선시하는 논리에 맞서 대안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으로선 지역에서 역량을 형성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시민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수준에서 비판자로서 주장해왔던 대안을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실제로 구현해 가는 일과 통한다. 환경운동은 그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처지에 있다.

지역에서 움직이자. 지역에선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지역을 넘어 연대하자. 진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 생태사회를 지향하는 환경운동과 초록정치<sup>2)</sup>

### 1. 환경운동/시민운동과 정치운동

○ 이미 십 몇 년 전에 고 문순홍 박사가 지적하고 선배 활동가들이 공감했던 것처럼, 녹색운동은 애초부터, 그 본질로부터 새로운 정치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임. 왜 이러한 통찰이 우리 사이에 사라지게 되었는지, 이것이야말로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

○ 정치 주체 없는 시민운동, 정치 주체 없는 문화적 비판 등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그것은 결국 시장사회의 상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과 같은 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음. 자신의 가치를 구현하는 다른 정치적 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는 제아무리 대중적 열광을 이끌어낸 문화적 비판도 결국 시장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상품의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움. →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질문! 정치운동 없는 사회운동, 정치적 입장과 소속이 없는 사회운동가라는 게 성립 가능한 개념인가? 물론 정치 없는 엔지오, 정치 없는 엔지오 일꾼은 물론 가능. 그러나 사회를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총체적 비전을 모색하거나 지닌 사회운동 및 활동가가 정치적 견해와 소속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 이것은 반드시 제도정당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예컨대 하나의 정치적 독립공간을 지향하는 생태공동체는 그 자체로 정치적 견해와 소속이 될 수도 있다.)

○ 생태운동, 환경운동이 생명평화의 전망을 실현하는 정치운동이 되는 과정에서, 새로

---

2) 올 9월 열린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 중 일부

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원리들과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생명, 평화, 풀뿌리 주민 자치, 성평등, 나눔, 지구와 미래에 대한 책임, 다양성 촉진 등의 가치들은 모두 생태적 가치의 사회적 실현과정에서 동반자가 되어야할 가치들임. 근대적 정치 가치인 평등이 선진국, 혹은 백인 중산층 남성 따라잡기 식의 평등 개념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생태적(지탱가능한) 평등, 페미니즘적 평등이 되어야 할 당위에 대해 고민할 필요 있음.

○ 자치역량을 만들지 못한 생태주의 투쟁이 지역에 상처 이외에 무엇을 남겼는지 고민할 필요. 바깥의 환경운동이 그 지역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항변을 나도 한 적이 있지만, 부안 의정참여단의 여성활동가들과 함께 일본 지역정당 가나가와네트워크를 방문하는 사업을 성사시킨 작은 환경모임 레헴의 노력과 우리들 각자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 2. 환경운동의 변혁적 잠재력을 키워가는 초록정치 전략

### 1) 가치의 연대 — 생태에서 초록으로

○ 왜 새로운 정치가치가 필요한가?

- 보편적 정치 가치 : 자유, 평등, 평화, 민주주의
- 현실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해석, 보편적 가치의 구체화가 불가피
- 초록정치의 가치 : 생명, 평화, 풀뿌리, 지구, 나눔, 미래, 성평등, 다양성
- 예를 들어 ‘평등’ : 생태적(지탱가능한) 평등, 성평등, 세대간 평등으로 심화되지 않으면 안 됨.
- 예를 들어 ‘평화’ : 전쟁의 뿌리는 무엇인가? 전쟁에서 누가 한편이 되는가? 지탱가능성이라는 토양과 평화의 불가분성.

○ 왜 여러 가치가 연대해야 하는가?

- 근대민주주의와 생태민주주의 : 인간, 현세대, 자국민의 정치에서 지구시민, 미래세대, 못 생명의 민주주의로 (앤드류 돕슨)
- 그러나, 영국 역사학자 테오도르 켈딘은 [인간의 내밀한 역사]라는 탁월한 저서에서 녹색운동이 인간의 열망을 전체로 충분히 보지 못해 퇴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인간

삶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천연 자원과 같은 특정 관심사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녹색은 '이룩하지 못한 이상주의'가 되었다는 통찰이다.

- 문순홍(2002)은 초록(녹색)정치와 생태정치가 인간 사회와 자연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의 신생 분야인 정치생태학의 일부 분야로서, 순수 이론적 작업이라기보다 실천 지향적인 이론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초록정치는 생태정치보다 그 범주가 넓다고 평가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근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려 하는 다양한 실천적 노력과 이론, 가치지향의 '연대'가 '초록'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태민주주의의 문제의식과 지향을 포함하여, 여성주의,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가치, 비폭력 평화주의, 다양성의 옹호 등 근대 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는 정치적 흐름들이 포괄적 현실 변혁의 과정에서 연대할 때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이상형을 초록 민주주의라고 설정할 수 있다. 초록 '정치'는 이러한 민주적 이상을 실현하는 다원화된 주체와 실천과 전략을 일컫는다. 이런 의미에서 초록 민주주의나 초록정치는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이론이 아니며,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배태된 대안적 가치와 실천의 정치적 연대이다. 생태적 가치와 실천이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 하여도 결국 특정 부문에 대한 고려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초록정치라는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갈 때 현실 정치적 시민권을 가지게 됨은 물론 세계와 삶을 변혁할 전망을 얻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3)</sup>

#### ○ 정치의 확장으로서의 초록정치

- (1) 근대민주주의의 한계를 새로운 가치의 연대를 통해 극복
- (2) 국가주의 정치를 풀뿌리정치와 지구정치로 확장 : 지역정당운동으로 이어짐

## 2) 지역정당 — 지역에서 대안 실현하기

#### ○ 국가주의 정치의 양방향 확장 : 지구정치와 풀뿌리정치로

초록정치를 다른 정치와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하나를 든다면, 국가라는 틀에 갇히길 거부한다는 점을 꼽아야 마땅하다.

현대 정치의 여러 흐름들은 얼핏 다양해 보이지만, 인간, 그 중에서도 현세대, 그 중에서도 자국민의 정치라는 점에서 초록정치와 날카롭게 대비되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

---

3) 생태적 가치와 실천만으로 현실의 포괄적인 변혁을 이루려 한다면, 그러한 실천은 생태권위주의나 생태파시즘과 친화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런 의미에서 초록정치운동은 정치의 범위를 자국민에서 지구시민으로, 현세대에서 세대간 지탱가능성으로, 인간에서 못 생명으로 확장하는 의식적 노력이라 말할 수 있다. 현실정치에서 이 같은 노력은 국가라는 틀에 엄격히 갇힌 정치를 ‘지구정치’와 ‘풀뿌리정치’라는 두 방향으로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기후체계의 붕괴, 전쟁과 테러의 일상화, 기아와 채무의 악순환, 점증하는 초국적 기업들의 권력 등등 — 그러나 지구정치를 긴급하게 요청하는 이유는 이들 ‘지구적 문제들’ 때문만이 아니다.

동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결정, 교통난과 오염을 덜어보자는 지역 정책조차 이제는 지구정치의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하자는 지방정부 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되고, 경차에 주차비 혜택을 주자는 지방의회의 결정은 큰 차를 만드는 초국적 자동차회사들이 반대하여 좌절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이, 지구를 누비는 권력들과 풀뿌리 생활인들의 욕구가 충돌하는 첨예한 정치현장이 되었다.

따라서 아주 흥미롭게도, 풀뿌리 주체들이 다른 누구보다 지구정치의 주체로 나설 절박성을 갖게 되었다. 학교급식 사례에서 국가는 WTO 협정과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를 들어 이들 조례를 법원에 제소하는 배역을 맡았다. 이 험악한 지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는 나를, 내 아이의 건강을 책임져줄 위치에 있지 않다. 적어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 생활인으로서 필자는 이렇게 느끼고 행동한다. 풀뿌리정치, 우리 동네의 지역정치라는 장에서는 나를 홀대하지 않고 (국가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권력들로부터) 지켜줄 정치적 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수준의 정치를 지구정치와 풀뿌리정치 양쪽으로 확장한다는 초록정치운동의 과제는 한 과제의 두 측면이라 할 것이다.

지구 곳곳의 초록정당들과 초록정치운동들은 이와 같은 노력을 실제로 펼쳐온 유일한 정치 흐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초록정치운동은 이미 공동의 현장을 갖춘 지구정당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초록정치운동은 그 탄생 배경과 정체성을 풀뿌리 지역정당에 두고 있다. 태즈메이니아초록당(Tasmania Greens), 호주초록당(Australian Greens), 지구초록당(Global Greens)은 서로 위계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그 중 어느 하나가 특별한 권한을 차지한 정치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초록정치다. 아시아태평양 초록정치운동의 연대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대는 국가단위로 구획된 정치주체들 사이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 아시아태평양초록정치네트워크의 결성은 국가를 넘어 아시아태평

양의 정치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풀뿌리 정치운동, 사이버정치운동, 청년정치운동 등을 포함하여 국가 수준의 정당(national party)으로 국한될 수 없는 다양한 정치주체들을 지구정치운동의 평등한 주체로 담아낸다는 과제와 관련되어 있다. 초록정치운동은 날로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문제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정치주체의 다양성을 어떻게 심화하고 이들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 지역과 지역정당에 주목하게 된 이유들

(1) 지방자치 참여의 경험을 통해 — 개인 당선시킴기에서 지역정치운동의 주체 형성으로

지금까지 시민사회운동의 지방자치 참여는 주로 개인 당선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초점을 두었다. 단체들의 연대로 참여한 경우도 질적으로 다르진 않았다. 그러나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정치라는 장은 시민사회운동의 단순한 연장이라기보다 새로운 운동의 공간이라는 점이 점점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기성정당에 기대지 않고 당선된 정치활동가들이 생겨나면서 이들 지역은 새판짜기를 지향하는 풀뿌리 정치운동을 겨냥하게 되었다.

(2) 지역시민사회운동의 맥락

지역시민사회운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부문이나 단체의 과제를 넘어서는 공동의 비전을 설계하고 실현하자는 욕구가 증가했다. 또한 지역 기득권 세력이 부당하게 독점한 지역정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지역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실현이 어렵다는 인식도 대안 역량 형성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협력과 지역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촉진했다.

(3) 대안 가치 실현의 맥락

국가 수준의 운동은 정부, 기성정당, 재벌에 대한 비판, 감시, 개혁에 성공적이었지만, 생명, 평화, 풀뿌리, 성평등, 복지 등 시민사회운동의 대안가치를 실제로 실현하는 일은 지역을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이 점점 더 확대되었다. 전국적 반핵운동이 비판과 저지에 주력해온 반면 부안의 반핵주민운동은 자치역량과 결합하여 지역의 생태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해볼 수 있다.

(4)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맥락에서

국가 수준의 민주화와 대의제 민주주의는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이것만으로 실질적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생활인의 직접 참여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일이 민주주의 심화의 다음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5)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한 생활인의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지역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충돌하고 있고, 경차에 주차비 혜택을 주자는 지방의회의 결정이 초국적 자동차회사들의 반대로 좌절되기도 한다. 이 와중에 중앙정부는 생활인의 요구가 아닌 초국적 기구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풀뿌리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 생활인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생활인의 입장에서 지역은 중앙정치의 부속품이 아니라 생생한 정치현장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 지역정당은 삶과 사회를 변혁하는 핵심 운동

- (1) 지역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와 개발·성장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주류(mainstream)를 형성하고 새로운 발전의 경로를 가시화하며 대안의 모델을 실현해 간다.
- (2) 풀뿌리 지역정당운동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성 주류의 압도적인 힘에 대항하며 대안의 공간을 창출한다.

○ 지역정당운동의 현재와 전망

- (1) 2006년 지방선거 참여 흐름의 특징 : 개인과 개별 단체 차원의 지방자치 참여에서 지역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지역정치운동, 즉 초보적인 지역정당운동으로 전환
- (2)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성정당과는 독립적인 지역정치운동 주체 형성 노력 등장
  - 도봉 시민정치네트워크 무지개, 군포풀뿌리정치연대, 고양초록정치연대 등 7-8개 지역.
  - 지역시민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참여. 단체 간 연대보다는 개인 참여로 이뤄짐.
  - 거칠게 개념화 하자면 ‘풀뿌리와 초록을 지향하는 지역시민정당’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음.
  - 단체 및 활동가들의 협의를 넘어 지역의 대중적 정치세력으로 나아가느냐가 관건.
- (3) 다른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가 사이에서도 지역정당에 대한 관심이 큼. 가나가와네트워크 등 일본의 광역 지역정당 사례는 이미 폭넓게 알려짐.
- (4) 지역 간 네트워크 추진 중
  - 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준) : 현재 5개 단체와 6개 지역 개인들이 참여하여 추진 중. 시민사회운동을 기반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 참여할 개인 및 지역·부문단체들의 네트워크이며, 선거참여의 성과를 바탕으로 풀뿌리 정치운동의 수평적 연대에

기초하여 생명, 평화, 성평등, 풀뿌리 민주주의 등의 대안/초록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을 공식 표명. 선거법 개정 이후 대응방향 모색 중.

· 경기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 추진 중 : 고양, 과천,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에서 참여 중.

(5) 서울풀뿌리초록정당 추진 : 생활인들의 리더십으로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정당 추진 중. 2006년 지방선거에서 1명 이상의 지역구 서울시의원과 다수의 구의원을 당선시키고, 다른 지역과 연대하여 전국적 제도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

(6) 기성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새로운 개념의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커나갈 수 있을 것인가?

### 3) 중앙을 대신하는 풀뿌리 네트워크 전략 : 지역정당 네트워크로 정치세력화 추진

○ 연대하지 않는 풀뿌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 별의 힘은 사자의 힘과는 달리 연대에서 나온다. 사자를 에워싼 벌떼처럼 연대하지 않는다면 별은 아무 것도 아님.

○ 풀뿌리라는 말 자체가 생활인, 혹은 낮고 작은 주체들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대하여 거대한 소수의 힘을 포위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그런 의미에서 풀뿌리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존재(grassroots).

○ 하지만 현재의 풀뿌리 주체들은 각자의 영역과 과제에 갇혀 있어. 사회 변화의 잠재력으로서 기본적인 태세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 단순한 예로 최근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수많은 풀뿌리 주체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음. 그 결과 중앙이 제멋대로 만들어내는 장단에 맞추느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음. 현재의 풀뿌리 주체는 중앙의 장단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현실.

○ 일본의 지역정당운동 주체들은 하나하나는 상당히 발전에 있으면서도 지역을 넘어선 연대는 취약. 가나가와네트워크 등은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 간 협력 촉진에 착수.

○ 한국의 지역정당운동은 출발점에서부터 지역 간 연대를 동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 정당법과 개정선거법의 문제점 : 기성 국가주의 정당의 정치독점

· 비유하자면 시장(정치)은 기업(정당)에게 맡기라고 말하면서, 단 5대 재벌만을 기업으로 인정한다는 식이다.(정당설립 요건의 대폭 강화)

· 삼성 제품을 진열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현대 제품을 그 다음에 진열하고, 유기농 지역토산품은 가게 구석에 처박아 놓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식이다.(4대 정당은



기호 1~4를 전국 공통기호로. 풀뿌리 활동가 출신 무소속, 혹은 지역정당 후보는 7  
번, 8번, 혹은 10번...)

- 상품의 질을 따져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냥 삼성, 현대 같은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라는 식이다.(약 35종의 선거홍보물이 한번에 도착)
- 정당법, 선거법 개정운동과 더불어, 풀뿌리 지역정당 네트워크 방식의 제도정당 설립 추진으로 넘어서야.
- 속도와 시점은 문제가 아니다. 분명한 방향성과 확고한 발걸음으로 간다.

## 한국환경회의 선정, 2005년 10대 환경뉴스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개발정책은 2005년에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였다. 2005년 벽두,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며 국토 파괴 현장에 초록의 씨앗을 심기 위한 전국순례를 진행했고, 천성산 터널공사를 둘러싼 환경영향공동조사 합의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소송 1심 승소는 이 사회에 환경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를 둘러싼 식품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문제와 쌀개방 국회 비준 처리로 인한 농업과 환경의 위기 그리고 금권, 불법으로 얼룩진 방폐장 부지 선정과 더불어 새만금 조정권고안이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 된 것은 이 시대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아직도 요원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환경회의는 생명과 환경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2005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한다.

### 2005년 10대 환경뉴스

- 복제 배아 줄기세포 조작 논란
- 부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후보지 경주 선정
-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 지울스님 100일 단식
- 교토의정서 발효와 기후재앙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법정 공방 속에 강행되는 새만금 간척사업
- 매항리 미공군국제사격장 54년만에 완전 폐쇄
- 기업도시, 수도권 공장 허용 등 토지구제 완화
-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아쉬운 반쪽짜리 보호구역 지정
- 불완전한 청계천 공사, 생태계 복원 과제 남겨
- 중복 도로 건설로 9조원의 예산 낭비

### ■ 복제 배아 줄기세포 조작 논란

올 5월 황우석 교수팀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기술은 연구원 난자와 매대된 난자의 사용이라는 연구윤리 문제를 촉발시켰고, 연구 자체의 조작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 가능성으로서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과장된 분위기와 절대적 지지는 선부른 국익 논리로 인해 생명복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검증되지 않은 채 전폭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지원과 언론의 보도 행태는 국민들에게 생명공학에 대한 맹목적 환상을 여과 없이 심어주었으며, 실험검증 절차와 규제 없는 연구를 초래했다. 사이언스 논문 철회와 조작은 우리사회에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한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함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윤리와 과학, 국익과 진실간의 왜곡된 갈등을 극복하고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생명윤리, 안전성 문제에 대한 차분한 성찰과 논의가 필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 ■ 부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후보지 경주 선정

11월 2일 경주, 포항, 영덕, 군산에서 실시된 중·저준위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는 사상 유례 없는 불법과 불공정으로 얼룩지고 망국적 지역감정까지 조장되었다. 이번 주민투표가 불공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근본 원인은 부지 안전성은 뒷전인 채 ‘주민수용성’ 위주로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성찰없이, 주민 투표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로 변형시켰고, 찬성률을 높이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핵폐기장 유치를 ‘3000억원+알파’가 걸린 이권사업으로 포장하였다. 부재자 신고 과정에 공무원들과 통반·이장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군산은 부재자 비율이 39.36%에 이르는 등 사상 유례없는 부정이 발생했다. 결국 관권동원과 지역감정 선동의 영향으로 투표율과 찬성률로 경주가 중·저준위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아직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 선정 사업은 주민 투표 제도의 개선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법제화란 과제를 남겼다.

### ■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 지울스님 100일 단식

2005년 초 지울스님의 100일 단식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가치를 화두로 던져주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천성산 터널 공사 논란은 지하수 유출과 계곡수 고갈로 인한 고층 습지의 훼손, 생태계 파괴 문제와 더불어 활성단층지대에 장대터널로 인한 안전성문제를 둘러싼 것이었다. 천성산 반대운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

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온 정부의 사업 추진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천성산을 둘러싼 갈등은 지울스님의 목숨을 건 100일 단식 끝에 짧으나마 천성산 민.관 환경영향공동조사가 합의, 진행된 바 있다. 지울스님 단식은 생명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일깨웠다는 대다수의 평가와 함께, 개인의 종교적 근본주의와 단식이라는 극한의 운동방식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환경운동의 합리적 방향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했다. 현재 환경영향공동조사는 철도공단이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터널공사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표류중이며, 도롱뇽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남은 채, 지울스님의 재단식이 진행되고 있는바 갈등의 합리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 ■ 교토의정서 발효와 기후재앙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후, 8년 만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주범인 미국이 빠져 반쪽짜리 협약이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2005년 12월 몬트리올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통해 2012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의무 감축이 진행되며, 마라케시합의문을 통해 1차 의무 국가들의 감축의무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된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의무 부담 참여 논의도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정부는 교토의정서 가입국이면서 미국이 주도 하는 아태기후파트너십에 가입하여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토의정서 발표와 몬트리올 합의를 거치면서 배출권 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커니즘은 더욱 활성화되고 각국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지난 루사, 매미, 그리고 올해 12월 호남.서해안 최대 폭설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상최대의 극단적인 기상 현상까지 고려한 방재체계와 재해관리시스템 등 국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 법정 공방 속에 강행되는 새만금 간척사업

2005년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3년 넘게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범위를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정부산하에 두고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는다' 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이어 2월 4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하여 농림부 장관의 위법을 인정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운동의 중대한 결실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허구와 이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정당성을 입증 받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항소를 시작해 다시 법정공방이 되풀이 되었다. 12월 21일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농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결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즉각적인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3월~4월까지 새만금 방조제 최종물막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어민들의 삶 역시 바다와 함께 막혀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간척사업반대운동은 현재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마지막 2.7km의 방조제 구간을 지키기 위해 전라북도와 정부를 향해 합리적인 대안모색과 공동의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 ■ 매향리 미공군국제사격장 54년만에 완전 폐쇄

지난 8월 12일부터 폭격을 알리는 황색기가 내려지고 매향리 평화마을을 상징하는 녹색기가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올려지면서 매향리 미공군국제사격장의 역사적 종말을 고했다. 매화향기 가득하여 매향리로 불리던 이곳 주민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주 70시간 이상 비행소음과 폭격소음에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폭탄이 언제 마을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실제 매향리는 소음과 오발탄, 불발탄 등에 의해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1988년 시작된 미공군 폭격연습장에 대한 매향리 주민들의 폐쇄운동은 2005년 8월 30일, 매향리 미공군국제사격장이 완전 폐쇄될 때까지 노동자, 농민, 종교인 등 수많은 각계각층의 참여가 있었다. 이러한 대중적인 참여는 매향리 미공군국제사격장 폐쇄운동을 국제적인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사격장 폐쇄로 승리를 거둔 매향리는 또 다른 차원의 평화운동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평화운동의 상징인 매향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알리는 '매향리투쟁역사기념관' 건립을 시작으로 사격장 부지를 활용하여 평화박물관, 평화생태공원 등 '매향리 평화마을'을 단계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 ■ 기업도시, 수도권 공장 허용 등 토지구제 완화

지난 해 말 기업특혜, 사유재산 침해, 난개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올 해 7월, 무안, 무주, 원주, 충주에 기업도시 시범지구가 졸속 지정된 데 이어, 8월 환경성 평가에서 과락을 받은 해남영암, 태안 지구에 대한 기업도시 시범지구가 추가 지정되었다.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골프장과 카지노, 경마장 중심의 골프 도박을 통해서 서남해안 자연환경이 파괴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기업도시는 개발주의의 대명사가 되었

으며, 기업특혜와 선심행정을 남발하며 대규모 국토 파괴를 부채질 하고 있다. 더불어 11년간 규제되어왔던 수도권에 공장신.증설을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과밀을 부추기며 국토 전반에 토지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아쉬운 반쪽짜리 보호구역 지정

2005년 1월 1일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서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처와 10대강의 발원지인 백두대간을 보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은 지자체의 개발사업 추진 욕구와 산림청의 비민주적인 지정절차로 표류하던 중 지난 6월30일 26만3000ha로 확정·발표되었다. 환경부와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최소면적으로 설정했던 53만 ha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쪽짜리 백두대간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이다. 지자체 개발사업이 계획된 곳은 대부분 보호구역 설정에서 제외되었으며, 백두대간 훼손의 주범인 국책사업 또한 대부분 허용하고 있어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적극적 노력이 보다 필요하며, 향후 생태적 지속성과 연결성이 확보되어 백두대간이 제대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백두대간보호법 개정과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 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다.

### ■ 불안정한 청계천 공사, 생태계 복원 과제 남겨

47년 동안 서울 도심의 어두운 지하에 묻혀있던 청계천이 10월 1일 시민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복개도로와 고가도로가 걷히고 그 자리에 맑은 물이 흐르자 시민들은 환호하고 세계가 주목하였다. 하지만 청계천 공사는 자연형 하천복원이라기 보다 보기 좋게 만들어진 수경사업이다. 한강물을 끌어다 역류시키고 하천 주변에 불투수층이 증가했으며 식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천복원을 하는 경우는 없다.

한편 청계천 공사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목말라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짧은 기간에 1천만명이 청계천을 방문했고 청계천 공사의 정치적 효과에 자극받은 다른 지자체들도 앞을 다투어 하천 복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천 복개를 금지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정부도 하천 복원을 장려하기로 했다. 청계천 1단계 완공은 마쳤지만, 이제부터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청계천이 되도록 주변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 물순환 시스템을 회복하고, 청계천과 조화된 주변경관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 ■ 중복 도로 건설로 9조원의 예산 낭비

생태축 단절, 로드킬(road kill) 등 환경파괴의 주원인으로 등장해왔던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투자, 과잉건설 문제가 본격 제기되었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투자가 13구간, 총연장 597km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문제 가중뿐만 아니라, 9조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복도로 건설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혔다. 북한산 관통도로에 이어 계룡산 관통도로 등 도로 문제가 주요 환경 현안에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의 중복·과잉 과잉 건설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주-양평간 37번 4차선 확장 공사 취소라는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등 도로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12월 24일

한 국 환 경 회 의

\* 10대 환경뉴스는 카인즈 검색을 통해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환경문제의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후보로 추천하였고, 후보로 추천된 뉴스들에 대해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 활동가 및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점수환산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